

## 참여정부 수도권 규제에도 ‘경제 집중’ 더욱 심해졌다

본보·대전발전연구원 분석... 규제완화 땀 지방경제 붕괴

정부의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경제 집중도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비수도권의 경제 낙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특히 지역균형발전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참여정부에서도 수도권 경제집중 현상이 심화돼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앞서 선(先) 지역발전 정책을 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4일 통계청 및 국토해양부 자료와 대전발전연구원의 ‘총정권 공동발전 추진방향과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85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GRDP(지역내 총생산)는 38조1천억원으로 전국 GRDP 87조9천억원의 43.3%를 차지했다.

참여정부 때인 2006년에는 전국 GRDP 857조4천억원의 47.3%(409조3천억원)를 수도권이 점유해 참여 정부가 수도권 규제정책을 펴왔음에도 되레 수도권의 경제집중도는 크게

높아졌다.

권역별 GRDP를 비교할 경우 서울은 1985년 21조9천억원에서 2006년 193조1천억원으로 8.8배 증가했고, 인천은 같은 기간 4조원에서 41조원으로 10.3배 늘었다. 경기도는 12조2천억원에서 175조 2천억원으로 무려 14.4배 증가했다.

반면 광주시는 1987년(전남도에서 분리) 2조3천억원에서 2006년 19조1천억원으로 8.4배, 전남도는 6조6천억원에서 41조로 6.3배 증가하는 데 그쳐 경기도 증가율의 절반에도 못미쳤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9.7배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또 본보가 최근 통계청과 국토해양부 자료를 바탕으로 참여정부때인 지난 2002년과 2006년의 인구와 산업 현황, 제조·서비스업체 수, 공공청사 등 9개 부문에 대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집중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6년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48.5%(2천378만명)로 2002년 47.2% 보다 1.3%p(90만명)나 늘어났다.

제조업체의 집중도는 56.4%→56.6%(4천400개 업체 증가)로, 서비스업체는 45.7%→48.1%(1천300개 업체 증가)로 높아졌다.

반면 지난 2000년~2005년까지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기업은 광주 47개, 전남 20개 등 모두 844개에 그쳤다. 정부출자기관 집중도도 93.8%로 지난 2002년 60% 보다 33.8%나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가 수도권 육성책을 추진할 경우 비수도권 지역경제 붕괴는 물론 인구·산업의 과도한 집중으로 비대해진 수도권에도 성장 지체현상이 빚어지는 등 부작용이 뒤따를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인구·산업 집중을 막기 위한 수도권 규제에도 수도권 ‘출렁현상’이 여전히 상황에서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풀 경우 지방경제와 수도권이 공멸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가을 꽃단지

오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광주시 남구 양과동 효사랑 영상센터 일대에서 열리는 ‘제 1회 효(孝)사랑 녹색문화 산업전’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대단위로 조성된 우리 콩 단지과 가을 꽃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녹색문화산업전은 지역특산물 브랜드 개발 등을 위해 마련됐다. /나경주기자 mjna@kwangju.co.kr

## 비은행권 채무 10조원 넘었다

광주·전남 1년 새 15% 급증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으로 광주·전남지역 가계의 비은행권 채무가 지난 1년 새 15%나 증가해 총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권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등으로, 은행권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신용카드를 포함하지 않은 금융권의 1가구당 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인 1천800만원에 달하는 등 가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광주·전남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조9천602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7월(10조1천578억원)에 비해 7.9%(8천24억원) 증가한 것으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을 포함할 경우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의 비은행권의 총대출(16조5천637억원) 가운데 최소 60%(10조원) 이상은 가계대출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의 경우 최근 1년 새 15% 가량(1조6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역 비은행권 대출 가운데 단위농·수·축협의 상호금융 대출액이 전체의 68.3%(11조3천90억원)에 달해 농어가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 내 가구당 부채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의 2008년 광주·전남 추계가구(114만797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가구당 부채는 1천753만원, 지역민 1인당 빚은 619만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지역 내 가계대출 급증은 주택경기 침체 등 장기 불황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서민가계의 자금이 심각히 위축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2.4분기 현재 국내 가계신용위험도는 0.82로, 지난해 3·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상승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수치는 2004년 3·4분기(0.96)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것이며, 신용카드 ‘버림’ 붕괴로 신용위험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3년 1·4분기의 신용위험도는 1.71이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공무원연금 27% 더 내고 25% 덜 받는다

연금 보험료를 현재보다 약 27% 늘리는 대신 수급액(퇴직 후 받는 돈)은 최고 25% 줄이는 것을 골격으로 공무원 연금 제도가 바뀌게 됐다.

〈관련기사 5면〉



그러나 제도를 이렇게 바꿔도 국민의 세금으로 총당월 연금적자 보전금은 10년 후 현재의 5배 정도로 크게 늘어나 ‘무늬 뿐인 개혁이 아닌지’는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했다. 발전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제도가 바뀔 경우 정부의 연금 적자보전금은 올해 1조2천684억원에서 내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조~1조1천억원대를 유지하지만 이듬해인 2012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8년에는 현재의 5배 규모인

6조129억원까지 늘어난다.

또 정부의 적자보전금에 연금부담금, 퇴직수당을 합친 연금 관련 총재정부담금 추산액도 2009년 4조9천329억원에서 2018년에는 13조6천512억원으로 약 3배가 된다.

이는 공무원 연금 보험료를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5.525%에서 2012년에는 7.0%로 26.7% 올리는 대신 연금 비율을 현재의 과세소득 대비 2.12%에서 1.9%로 낮추는 등 수급액을 최고 25%까지 줄이기로 했지만 여전히 연금 수지의 불균형을 개선하기에는 크게 미흡하기 때문에 분석된다. /연합뉴스

## 現 중3 수능때 1과목 줄 듯

교육과정평가원 공청회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과목 수가 지금보다 1과목 줄거나 문과생은 오히려 1과목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기사 15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책연구진이 마련한 2012학년도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안은 크게 세 가지로 ▲탐구영역에서 최대 3과목을 선택하고 제2외국어·한문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하는 제1안 ▲현재 수능 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고교 1학년 내용을 출제범위에 포함하고 선택 2과목, 제2외국어·한문 1과목을 보는 제2안 ▲현행 수능 응시과목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제3안 등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CHICAGO**  
10. 3~ 10. 5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3일~오후2시, 7시/4일~오후3시, 7시30분/5일~오후3시  
공연문의: 062)220-0541, 1588-0766  
www.ticketmaru.co.kr

피부과학, 식물 유기자료를 주춧돌로  
IOPE  
www.iope.com